

KWDI

해외통신

2020년 10월 2차 (2020.10.16 ~ 10.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법률위원회, 여성혐오를 혐오범죄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 제안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여성혐오(misogyny)가 혐오범죄(hate crime)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9월 23일 발표한 혐오범죄 자문 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통해 “현행 혐오범죄 법에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성전환자 신분이 포함돼 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sex)과 젠더(gender)도 혐오범죄 관련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위원회는 정부 및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독립 기관이다.

▶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98 범죄장애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28~32항과 2003 형사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145항, 146항에 각각 명시돼 있는데, 영국 경찰과 검찰은 누군가가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에만 혐오범죄로 정의한다. 현행법에 따라 여성혐오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하지만, 혐오범죄에 여성혐오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영국 사회 곳곳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Citizens UK와 Women's Aid, the Fawcett Society를 비롯해 영국 의회 의원 조 스윈슨 등과 전 내무장관인 자키 스미스, 영국 노팅엄셔 주(County)의 자치경찰위원장인 패디 티핑이 딕 런던경찰청장과 새라 손튼 영국 경찰서장 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NPCC)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여성혐오를 혐오범죄로 분류해 처벌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 법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런 영국 시민 사회의 요구를 언급하며 “현행법에 성과 젠더를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추가하면 여성혐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Law Commission (2020.9.23.), “Reforms to hate crime laws to make them fairer, and protect women for the first time”, <https://www.lawcom.gov.uk/reforms-to-hate-crime-laws-to-make-them-fairer-and-to-protect-women-for-the-first-time/> (접속일: 2020.10.15.)
- Law Commission (2020.9.23.), “Hate Crime: Consultation Paper Summary”,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20/09/Hate-crime-final-summary.pdf> (접속일: 2020.10.15.)
- The Guardian (2020.9.23.), “Misogyny ‘should become a hate crime in England and Wales’”, https://www.theguardian.com/law/2020/sep/23/misogyny-hate-crime-england-wales-law-commission?CMP=fb_gu&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fbclid=IwAR1OjUoQ1TOz-OyLbuv_BqwpP-E-hvpg7Ae8pHxAotwhz07fhpY8HBjBEi0#EchoBox=1600851898 (접속일: 2020.10.15.)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혐오범죄는 대부분 인종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다. 영국 내무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영국 웨일스와 잉글랜드에서 경찰에 접수된 혐오범죄 관련 사건은 총 10만 3천 379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76%가 인종 차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혐오범죄 접수 사건 중 12.5%인 1만2천828건이 기소됐으며, 전체 접수 사건 중 1만 817건(10%)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률위원회는 현행 혐오범죄 관련 법이 현재 영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혐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여성혐오와 연령차별주의(ageism), 노숙인과 성 노동자(sex workers)와 같은 특정 계층을 향한 혐오가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만 혐오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률위원회 위원인 페니 루이스 킹스칼리지 런던 법대 교수는 "혐오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라면서 "법률위원회의 자문 보고서는 처음으로 여성혐오를 혐오범죄에 포함해 법을 통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보고서에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 EUROPE



유럽, 코로나19 위기 속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는 목소리 높아

채혜원 독일 통신원

한국에서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 국경은 물론 수많은 임신중지 관련 기관 및 병원이 폐쇄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든 상황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많은 임신중지 클리닉이 운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아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자료에 따른 것인데, 캐나다에서 2006년에 설립된 '위민온웹'은 임신중지 하려는 여성에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약 접근이 어려운 여성에게 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위민온웹'에서 제공하는 임신중지 약에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18년 지침에 따르면, 이 두 약은 혼용으로 자가 투약하기에 안전하다.

참고자료

- BR24(2020.10.1),
"Das ewige Dilemma: 25 Jahre Neuregelung des §218",
<https://www.br.de/nachrichten/deutschland-welt/streit-um-abtreibung-25-jahre-neuregelung-des-paragrafen-218,SC4L57r>
(접속일: 2020.10.15.)
- DW(2020.4.16.),
"Poles protest stricter abortion laws amid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dw.com/en/pires-protest-stricter-abortion-laws-amid-coronavirus-lockdown/a-53142475>
(접속일: 2020.10.15.)

‘위민온웹’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하잘 아타이는 “현재 많은 국가의 의료진과 병원이 코로나 감염 환자 치료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와 관련한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여성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웹사이트 검열이라는 권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한국 등이다. 스페인 역시 웹 사이트 접근을 금지했는데 이에 대해 스페인 내무부 관계자는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에서 온라인으로 처방약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라 이런 조치가 취해졌으며 스페인의 의료 당국 하에 관리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DW(2020.7.8),
 “Coronavirus pandemic reduces access to safe abortions”,
<https://www.dw.com/en/coronavirus-pandemic-reduces-access-to-safe-abortions/a-54099750>
 (접속일: 2020.10.14.)
 - BBC(2019.3.31),
 “Abortion: New laws come into force in Northern Ireland”,
<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politics-52068193>
 (접속일: 2020.10.15.)

구글 자료에 따르면 매달 2백만 명이 ‘위민온웹’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22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사이트에 가장 많은 사용자가 접속한 나라는 브라질이다. 이어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위민온웹’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많지 않은 데다 임신중지 이전의 상담 의무 규정으로 인해 낙인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비영리 운영되는 독일 상담 기관 프로 파밀리아(Pro Familia)의 관계자는 “위민온웹”은 독일 의료 시스템에 기록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 거주하는 사이트 사용자는 ‘위민온웹’을 통해 이웃 네덜란드의 의료 종사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임신중지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다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임신 12주 이내 여성이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임신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허용된다. 지난해 형법 219a조의 일부 개정으로 여성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수술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당국과 상담 센터, 그리고 독일 의학 협회와 상담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목소리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임신 중지 지원 네트워크(Britain’s Abortion Support Network)는 몰타와 폴란드와 같이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독일 언론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러 제한조치로 인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국경이 폐쇄된 이후 몰타로부터 두 배 많은 전화를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많은 여성들이 약물이 더 이상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여성이 임신중지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을 갖고 있지만, 임신중지 허용 기간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몰타는 폴란드처럼 유럽연합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지난해 제한적으로 임신중지를 합법화했지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데다 의료인에게 ‘시술 거부권’을 부여해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로빈 스완 북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북아일랜드 여성이 영국에서 안전하게 무료로 임신중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때까지 영국에서 무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행 제한 조치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폴란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엄격한 임신중지 법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어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폴란드 거리 곳곳에는 ‘정부는 여성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울 것’이라고 적힌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정치인들의 비판 목소리도 높다. 바바라 노바카 의원은 “의회는 광신도들이 내놓은 임신중지 사안이 아니라 기업 파산 등으로 인해 일자리와 집을 잃고 있는 폴란드 국민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폴란드에서는 매년 약 15만 건의 불법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폴란드인이 낙태 금지법 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CANADA



캐나다,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젠더폭력 대응강화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미국과의 국경을 역사상 최초로 봉쇄하고 전면적인 락다운을 시행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진정되는 듯 보였는데, 2020년 8월까지 일일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천 명 이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 특히 9월 개학과 함께 확진자가 폭증하여 캐나다는 2차 유행에 들어서게 되었다. 9월 들어서는 캐나다의 일일 확진자가 천 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3월에 발표된 긴급 지원책들은 대부분이 8, 9월에 만료되어 9월 23일 캐나다 연방정부 의회 개원 연설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캐나다 내 코로나19 2차 유행에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20.10.02.), “Government of Canada accelerates investments in shelters, transition housing and other organizations providing gender-based violence supports and services”, <https://www.canada.ca/en/status-women/news/2020/10/government-of-canada-accelerates-investments-in-shelters-transition-housing-and-other-organizations-providing-gender-based-violence-supports-and-se1.html> (접속일: 2020.10.19.)

이날 개원 연설에서 여성 관련 정책은 크게 여성의 경제적 안녕과 젠더폭력 대응 두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다. 현재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대 이후 최하위로 치닫고 있고, 특히 저소득, 이민자와 유색인종 여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의 경제적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 예컨대, 캐나다 여성재단에 의하면 2020년 6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77%의 경제활동 시간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캐나다 정부는 조만간 페미니스트적, 교차적(intersectional) 관점을 반영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for Women in the Economy)을 구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젠더화된 돌봄의 의무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접근성 높은 퀵백주 모델을 참고한 아이돌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예고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기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돌봄 직종 등 여성 집중 저임금 직종 등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The Globe and Mail(2020.10.08.),
"Federal government doubles
emergency funding to help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https://www.theglobeandmail.com/politics/article-federal-government-doubles-emergency-funding-to-help-victims-of-gender/>
(접속일: 2020.10.19.)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20.09.24.),
"Statement on the Speech from the
Throne",
<https://canadianwomen.org/blog/throne-speech-2020/>
(접속일: 2020.10.19.)

젠더폭력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젠더폭력 액션플랜을 코로나19 시국에 맞게 적용하려면 피해자들이 어디에 살든지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9월 23일 개원 연설에서는 코로나 시국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쉼터와 임시거처(transition housing)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연방정부는 며칠 후인 10월 2일 5천만 달러(약 432억원)를 젠더폭력 쉼터 등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투자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천만 달러(약 86.5억원)를 쉼터와 성폭력 센터에 지원하여 단체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또 다른 천만 달러를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젠더폭력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3천만 달러를 기타 여성단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늘어나는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약 820억 달러 규모의 비상 재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폭력 센터와 여타 젠더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미 5천만 달러를 이미 편성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5천만 달러를 편성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총 1억 달러를 젠더폭력 관련 재정 지원에 투여하게 되었다. 10월 2일 이러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여성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젠더폭력을 주요한 위험 요소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올해 3월과 4월에 캐나다 통계청이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열 명 중 한 명의 캐나다인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앞으로 높아질 가정폭력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혹은 극심히 우려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 캐나다 언론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2020년 3월 재정 지원으로 온타리오의 291개 단체들이 문을 닫지 않고 코로나 사태 내내 센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위생 절차를 강화하고 늘어난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원거리로 제공하기 위한 기기 등을 구매하는데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예컨대 글로브 앤 메일(Globe and Mail)지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Women's Habitat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슈퍼마켓 화장실에서 걸려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기부와 자선행사 등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던 이 단체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64,000달러의 정부 재정 지원 받아 계속 활동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단체 Alternatives for Women 또한 32,000 달러를 지원 받았는데, 이 단체는 보통 가해자가 출근한 사이 센터에서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해왔었는데 락다운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출장 상담이나 야외 상담소 설치 등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센터 활동을 지속하였다고 한다.